

'불합리한 금융관행' 뿌리뽑는다

금감원, 제3차 금융 관행 개혁안 발표 비은행 고금리 대출·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 개선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알림의무 위반을 과도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불합리한 영업행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손본다. 저금리에도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용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점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말 카드사의 업무협약(MOU)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시 금리 차등과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전 반적으로 고친다. 대출취급시 대출 상품설명서 미교부,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5년으로 일괄 설정, 연대보증 관행 등이 대상이다. 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간화, 신규 대출시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업무 절차를 개선한

다. 실적·폐업 등이 발생하면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관행도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눈에 띈다.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는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에 고위험 직군으로 직무가 변경될 때 알리지 않는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 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활용이 거의 없는 건강인 할인특약은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과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제도는 비흡연, 정상혈압 등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인데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 중 1.6%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의료보험은 노년기에 보험료가 약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



KT GIGA IoT 헬스 적금 출시 KT는 KEB하나은행과 3월 새 학기를 맞아 'KT GIGA IoT 헬스 적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KT GIGA IoT 헬스 적금 상품은 '정기적금(1년제)에 가입하면 2.5%대의 시중 최고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판매된다.

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유병자용 실손의료보험)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3차 금융관행 개혁에는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 마련,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서태중 수석부원장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결과 2월말 현재 총 407개 세부과제 중 320개는 이행을 완료했다"면서 "금융거래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사라지도록 금융관행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월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허용 여부 이번주 결정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 8개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이날 박 회장이 요청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서면 부의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각 채권단이 판단을 내려 산에 입장을 전달하면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박 회장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주주협의회 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우리은행(33.7%), 산업은행(32.2%) 두 곳 중 어느 한 곳만 반대해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능해진다.

지난 17일 주주협의회가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할 때만 해도 컨소시엄 허용 논의에 대한 채권단의 움직임은 형식적인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주주협의회가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더블스타에 매각을 하면 향후 금호아시아나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과 박 회장간 갈등이 정지권으로 번지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특히 대선주자들이 중국 기업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결국 채권단이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채권단은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각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대변인 박수현 전 의원도 같은 날 논평에서 "장기고용보장, 연구 및 설비투자,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선매수협상자로 선정된 더블스타가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금호타이어로 인한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와 노조가 참여하는 민관합작펀드를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도 "금호타이어에 대한 불공정 매각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중국 더블스타에 허용한 컨소시엄 구성을 박 회장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금융위, 4차 산업 선제적 대응안 마련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금융시장에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됐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모바일카드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테스트베드가 시행되면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단말기의 경우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가 허용된다.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를 진행해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직접 개발한 금융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 영업하도록 허용한다.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 지정대리인 지

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은행과 고객이 자금 이체 전에 수신계좌의 사기계좌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하지만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활용 불가능하다.

하지만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 등에 사용권한을 위탁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마련 방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두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관련 비조치 의견서 발급 수요를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법과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AI나 자율주행차, 3D 프린트 등 차세대 산업분야 관련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뉴시스

비흡연·혈압·체질량 정상시 '건강특약'

사망 보장 상품 고객 중 보험료 할인... 최근 3년간 신계약 중 가입율 1.6% 불과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 등은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건강특약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가입 절차가 번거로운 탓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 중 건강인(체) 할인특약을 받은 사례는 1.6%에 불과했다.

건강특약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에서 건강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다. 통상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건강특약에 가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은 4~5%, 여성은 1~2%의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신보험 기준으로 최고 할인은 14.7%에 달한다.

지난해 금감원이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가지 조건을 특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험사들 중에서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두 보험사들이 평균 가입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간 건강체 특약 가입 현황

을 보면 삼성생명이 2.72%로 평균을 웃돌았고 미래에셋생명 1.39%, 동부생명 1.38%, 교보생명 1.1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화생명의 가입률은 0.14%에 그쳤고, 흥국생명 0.25% 알리안츠생명 0.29% 등도 1%가 채 되지 않았다. 다만 비흡연만을 조건으로 내세운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가입률은 70%대로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것을 우려해 기피하는 측면이 있고, 보험설계사는 인수 거절시

민원 우려 등으로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업무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전단계약자)에게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 등 할인특약 신청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보험가입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상품 목록, 보험회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을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상품공시제도도 손질한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대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다온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